
'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(안)

2019. 2. 27.



행정안전부
국가기록원

|| 목 차 ||

I . 2018년 성과와 반성	1
II . 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	5
III . 2019년 중점 추진과제	7
1.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지속 추진 및 역량 강화	8
①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지속적 추진	
② 기록관리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	
2. 미래지향적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..	10
① 전자기록관리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및 이행	
② 중앙부처 CRMS, 지자체·교육청 RMS 이용 활성화 추진	
3. 기록관리 현장과의 협력·지원 강화	12
①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 역량 강화	
② 현장과의 협력을 통한 주요기록물 이관·수집 강화	
4. 국가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서비스 혁신 ..	14
① 주요기록물 복원 및 전자기록 장기보존 체계 구축	
② 기록물 공개제도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	
5. 대통령기록관리 정책 역량 및 전문성 강화	16
① 대통령기록관리 정책 역량 및 협력 강화	
②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·서비스 내실화	

I . 2018년 성과와 반성

1. 2018년 정책성과

□ 국가기록관리 혁신기반 구축

- 공공·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(12.21.)
- 「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단」 운영(2.19.~8.31.) 및 혁신과제별 실행안 마련
-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 체계 마련 * 대통령기록물생산지원단 출범('19.1.1.)
- 각급 기록관 지원 및 영구기록물관리기능 재정립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
- 우리원 기록관 설치 및 현용기록관리 개선방안* 마련
* 부서 단위과제·보존기간 적정성 검토 및 비전자기록물 실태 점검 등을 통한 개선안 도출

□ 디지털 환경에 대응 가능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

- 「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/ISP」 사업 추진 및 이행전략 수립
- 「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모델 재설계*」 연구용역 추진 및 모델 제시
* 웹기록·SNS 등 다양한 전자기록유형 수용 모델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연구
- 데이터세트 형태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매뉴얼* 개발
* 관리 쉘 과정(생산, 운용, 이관, 보존) 세부 절차, 담당별 역할 등
-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안 및 유형별 관리체계·포맷정책 기본방안* 마련
* 유형별 관리 프로세스, 보존포맷 다양화, 장기보존패키지 기술 확대 등
- 정부지식 공유·협업을 위한 중앙부처 CRMS 2차 확산 완료('19.1.)
※ CRMS 확산 : ('16) 1개 → ('17) 15개 → ('18) 28개

□ 주요 기록물의 차질 없는 이관 및 보존·관리

- 중앙행정기관 등이 생산한 보존가치 높은 기록물 수집
※ 전자문서('07년 생산분·폐지기관) 약 300만 건, 비전자문서 등 약 11만권
- 기 인수(이관) 기록물 정리·등록을 통한 기록정보 체계적 보존관리
※ '18년 기록물 정리 26만권(종이 24만권, 기타유형 2.1만권)/일자리 창출 141명*21일*7월
- 5·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*, 민청학련 기록(105권) 등 주요 기록물 기획 수집
* 국방부, 안보사(구 기무사) 등 일반문서 64권, DB 파일 977건, MF 13롤, 시청각 108점 등
-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물 수집·정리
※ 해방전후 교육관련 기록물(16,577매), 조선인 강제동원(2,384권), 한국 관련 해외소재 기록물(27,506매)
- 소장 세계기록유산(5.18), 헌법기록물 및 손기정선수 우수상장 등 복원처리

□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

- 비공개 기록물 679,283건(30년경과), 1,562,398건(30년미경과) 공개재분류
- 온라인 원문서비스(2,020만건) 확대 및 공공누리 서비스(1,467만건) 제공
- 「바로검색 열람서비스」 확대(국립호국원 영천·임실·이천·산청, 3.15민주묘지, 공훈발굴과)
- 다양한 기록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
 - ※ 「해외수집기록물(한국과 유엔)」, 「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」, 「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」 등
- 국가기록물·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시의성 있는 기획전시 추진
 - ※ 제99주년 3·1절 기념식 기록특별전(3.1.~3.31.), 제73주년 광복절·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국가기록특별전(8.14.~8.28./순회전 8.30.~10.5.), 남북정상회담특별전(9.11.~10.7./순회전 10.8.~11.11.)

□ 기록관리 국내·외 교류·협력 증진 및 연구역량 강화

- 기록관리 담당자·기록학계·유관기관과의 교류·협력 강화
 - 「기록의 날」 기념행사 개최(6.9.), 전국기록인대회(11.19.~20.) 공동주최
 -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(MOU) 체결(5건)
- 기록관리 R&D 연구성과 발표 및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·외 회의 참여
 - (국외) 시청각기록 음성인식 변환연구(미국), 세월호 침수기록 복원사례(일본) 등
 - (국내) 전국기록인대회 보존복원 분야 세션 개설 및 4개 주제 발표
- 원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세미나 추진
 - 월례 세미나(11회), 현안과제세미나(3회), R&D 자체과제 세미나(4회) 실시

□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

-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·적극적 대응
 - '19년 예산은 전년대비 90억원 증가(↑15%)한 689억원 확보
-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·재산업무 처리 및 회계 분야 전문성 강화
 - 공개경쟁 원칙 엄격 적용으로 회계·계약 업무 투명성 제고
 - 기록관리 주요 장비 실태점검을 통한 대장 정비 등 재산관리 개선

2. 반성 및 보완

□ 기록관리 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미흡

- 시급한 현안과제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일정 성과를 축적하였으나, 지속적 혁신 추진을 위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
- 기록관리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법 개정 절차 지연

⇒ 국가기록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추진
⇒ 공공·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적극적 국회 대응

□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전자기록 관리체계 전환 가속 필요

- 데이터세트, 대용량 영상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이 급증하는 환경에 맞추어 업무전반 전자기록 '다중 관리체계'로 전환 필요

⇒ 다양한 전자기록의 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정비

□ 기록관리 현장과의 체계적 소통 채널 마련 및 실질적 지원 미흡

- 기록관리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일원화된 소통 채널 미비 및 기관과의 인사 교류 저조
- 기록관리 현장의 역량 강화 및 현안 해결 등 실질적 지원 미흡

⇒ 기록관리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 및 소통채널 단일화 마련
⇒ 기록물 분류체계 정비 지원 및 기록관 설치·인력배치 기준 정비

□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고

- 그간 콘텐츠 위주의 개발에 치중, 소장 기록물의 제공 및 검색 기능 강화 등 아카이브 포털로서의 서비스 부족

⇒ 주제 중심에서 소장기록물 중심 콘텐츠 개발 및 '기술서'와 '생산기관 변천연혁정보' 등 상호 연계성 및 활용 강화

Ⅱ .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

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

□ 정책여건

《 SWOT 분석 》	
(1) 강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'을 위한 공공·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예정 ▪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/ISP 사업을 통한 중장기 전략목표 확인 ▪ 부처전담과 창구 단일화로 전문성 강화 	(2) 약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록관리 혁신 추진 및 지속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부족 ▪ 기록관리 현장 지원 실무경험 부족 ▪ 기록물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
(3) 기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가기록관리 혁신과제 수행에 대한 민·관·학 요구 증대 ▪ 디지털환경에서의 기존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필요 공감대 증대 ▪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 증대 	(4) 위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웹기록, 데이터세트, 대용량 영상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 급증 ▪ 클라우드, 인공지능(AI), 블록체인 등 전자 기술환경의 급속한 발전 ▪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장기화로 중요 지방기록물의 관리 위험 노출

□ 정책방향

목 표

기록관리 현장 강화로 지속적 혁신 추진

추진 방향

-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지속 추진 및 역량 강화
- 미래지향적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- 기록관리 현장과의 협력·지원 강화
- 국가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서비스 혁신
- 대통령기록관리 정책 역량 및 전문성 강화

Ⅲ . 2019년 중점 추진과제

1.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지속 추진 및 역량 강화

과제1

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지속적 추진

- ◇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 및 제도개선 추진
- ◇ 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의 내실있는 추진

□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조속 시행 및 시행령 개정 추진

- 공공기록물법 개정(안) 상반기 국회통과 및 시행을 위한 준비
 - 국회 심사의결과정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의원 방문설명 등 적극 대응
-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추진
 - (공공) 폐기금지제도 운영절차, 기록물관리기관 시설·장비기준 등(20여개 과제)
※ 개정(안) 마련(2월)·의견수렴(~4월) → 개정계획 보고(5월)·입법절차 추진(~9월)·시행(10월)
- 법제정 20주년 계기 공공기록물법체계 전면 재설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
 - 기록관리 환경변화, 관련 법령, 국제 동향전망 등 분석→법체계 개선방안 마련

□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
- 기록관리 혁신·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
 - (내용) 기본방향, 비전 및 사명, 추진전략 및 체계, 추진과제* 등
* 혁신과제, 제도개선 사항과 연계·수립, 독립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·위상, 기능강화 방안 포함
 - (일정) 방안 검토 및 비전·미션 수립(5월)→ 비전·미션 선포(‘기록의 날’ 행사와 연계)→발전계획(안) 마련 및 의견수렴(8월~11월)→공포(12월)
- 추진체계 정비 및 추가과제 발굴, 추진상황 점검(분기별) 등 혁신 지속 추진

□ 기록관리 연구활동 및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

- 주요 정책 및 현안 공유, 다양한 참여층 중심의 연구세미나 운영 강화
 - 민·관·학계 연계 정책포럼(분기별, 연 3회), 원내 연구세미나(연 8회), 현안 과제별 세미나(상시, 3회) 개최·운영
- 연구활동 연계 기록관리 학술정보지 발간·배포(11월)

과제2

기록관리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

- ◇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*
* (국정과제 8-1) 혁신적인 열린정부(지방기록물관리체계 개선 법령 개정 및 국비지원 추진)
- ◇ 기록관 설치 및 인력배치 기준 정비,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

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

- 연구용역 추진 등 설립의지를 가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
 - 자체 연구용역을 완료한 지자체(부산·대구·대전·경기·충남) 중심 집중지원
 - ※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, 실무협의회 개최, 국비지원 방안 검토 등
-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
 - 지방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기록원 설치·운영모델 및 재원 확보·분담방안 등을 정책연구(지방분권제도과 주관) 과제로 추진

□ 기록관리 기반강화를 위한 기록관 설치 및 인력배치 기준 정비

-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록관 설치 대상 및 운영 방식 정비
 - (현행) 기관명 열거 → (변경) 설치기준 마련, 기관별로 탄력적 운영
-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정비 및 확충 지원
 -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인력 구성 및 소요인력 산출기준 마련
 - 기준에 따른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* 배치 및 인력 확충**안 정비
 - * 교육지원청 40.9%(72/176개), 군기관 55.7%(65/121개), 공공기관(공사·대학 등) 76.9%(698/908개)
 - ** 1인 기록관 체계 탈피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요원 외 업무담당 소요인력 기준 정비

□ 기록관리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교육과정 운영

- (전문요원) 현장 문제해결 및 전문성·윤리성 강화 추진
 - ※ 기록관리전문가 신규자(2년이내), 경력자(3년이상), 마스터(10년이상), 기록관리 강사양성
- (기록관)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형 특화교육 실시
 - ※ 기록관리 법제, 기록물 분류·평가, 공개·활용, 보존 등
- (처리과) 기관별 자체교육 비중 확대 및 기본이해 중점 교육
- (특별교육) 디지털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 교육 확대
 - ※ [초급] 4차산업혁명과 전자기록, [중급] 기록관리시스템 활용, [고급] 전자기록 스페셜리스트

2. 미래지향적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과제1

전자기록관리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및 이행

- ◇ 전자기록관리 중장기 실행전략 확정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
- ◇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관리 방안 마련 및 시범 적용·확산

□ 전자기록관리 중장기 실행전략(안) 확정 및 이행계획 수립

- 원내 의견수렴(~3월), 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·확정(~6월)
 - 관계기관·부서 협력하에 추진과제별 추진체계 및 이행계획 수립(7월)

< 전자기록관리 중장기 실행전략(초안) >

- **(기본방향)**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관리 정책 및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패러다임 전환
- **(추진전략)** 미래지향적 업무설계, 통합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, 지능형 기록관리 서비스 구현
- **(추진과제)** ①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·전략 수립, ②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③ 전자기록관리 법제도 정비 ④ 전자기록관리 기술 지원체계 구축 ⑤ 국가기록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⑥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⑦ 클라우드 기반 온-나라기록관리 통합 ⑧ 지능형 기록서비스 기반 마련 ⑨ 지능형서비스 기반 미디어플랫폼 구축
- **(추진일정)** '19년~'22년(4년) ■ **(소요예산)** 35,715백만원

-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**예산확보 추진**(~6월)
 - 중기재정 및 '20년 예산 반영을 위한 부내외 예산 수립절차 대응
 - * (소요예산) 35,715백만원(총액) : '20년 8,203 / '21년 14,960 / '22년 12,552
- **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**
 - ※ (사업기간) '19.3.~12.(11개월), (사업예산) 8.6억, 과기부 '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'으로 추진

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시범 적용 및 확산 방안 마련

- '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적용 사업' 추진(6~11월)
 - (대상) 우선순위 상위 시스템(고유, 공통 포함) 약 20개 내외(사업비 2억)
 - (목표)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완성 및 처분 관리(폐기·보존 등) 적용
-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**확대방안** 마련(예산 확보 병행)
 - 5년간 중앙부처 기록관리 대상 480개 우선 적용(1,600개 중 구축 10년 경과 30% 선정)

구 분	총합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시스템수(개)	480	20	100	110	120	130
소요예산(백만원)	3,848	200	872	898	925	953

과제2

중앙부처 CRMS, 지자체·교육청 RMS 이용 활성화 추진

- ◇ 행정업무 협업 기반에 부합한 CRMS 관리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
- ◇ RMS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속적 컨설팅·교육 추진

□ CRMS 전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* 44개 부처 전환 완료('19.1.)

- 중앙부처 기록관은 기록업무에 집중, 국가기록원은 CRMS 전담 운영
 - 기관별 운영상태 점검, 업무소요 모니터링 및 적절한 자원 배분 등

《 기대효과 》

- (시스템 측면) 자원 활용·증설 단축(2년→4월), 부처 통폐합 시 기관간 인수인계 신속 추진(1년→3월) 및 각 부처 시스템 운영부담 경감(기관별 0.2MM)
- (SW 관리대상) 기존 43개 기관별 운영에서 1개 응용 프로그램 통합 유지관리

- CRMS 업무협약체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('19.4., 행안부 훈령)
 - 협약체 구성, 부처 통폐합·신설 및 자원 활용·배분·반납 절차 등
- CRMS 기록물 부처간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개대상 범위, 시기 등 협의 추진
 - ※ 업무협약('19.4.) → 시범운영('19.6.) → 공동열람서비스('19.7.~)

□ 폐쇄망 이용기관 독립형 CRMS 개발 및 전환 지원

- 경찰청 CRMS 전환 시범적용 및 정상 운영('19.2.~)
- 독립형 CRMS 설치 가이드 마련 및 기술 지원
 - ※ 중앙부처(국방부, 외교부, 대검찰청, 국세청, 방위사업청), 지자체 등 자체 전환 시 지원

□ RMS 원격점검 지원 확대(격월) 및 컨설팅·교육 추진

- 광역시·도 및 교육청 등 시스템 운영·연계, 포맷변환 서버 등 원격점검(격월)
- 시·군·구, 군기관 등 요청기관 대상 방문·원격 RMS 컨설팅 지원(상·하반기)
- 「꼭 알아야 할 RMS 100문 100답」 개정판 제작 및 배포(10월, 격년)
 - '15년 이후 표준RMS 기능개선 사항 및 중앙부처 CRMS 내용 등 반영

《 RMS 자체 운영기관 현황 》

기관	광역시·도	시·군·구	교육청	군기관	국·공립대	공공기관
604	17	228	193	121	12	33
국가기록원이 RMS 응용S/W 정기 배포 ※ 중앙행정기관 133개 직접 운영						

3. 기록관리 현장과의 협력·지원 강화

과제1

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 역량 강화

- ◇ 기록관리 현장성 강화를 위해 기록관 전담체계 구축
- ◇ 기록물 분류체계 분석 및 개선 등 기록관리 지원 토대 마련

□ 기록관리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

○ 기록관 지원 전담체계 구축 및 기록관과의 소통채널 단일화

- 기관유형, 기능을 고려한 전담부서·인력 운영, 기록유형별 관리방안 마련
- 기록관리 현장을 반영한 기록관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

《 현장지원 전담체계(기록관리지원부) 》

- 지원정책과 : 일반행정·경제분야 중앙행정기관 29개, 특별행정기관 66개
- 지원기준과 : 사회·통일·외교분야 중앙행정기관 20개, 특별행정기관 81개
- 공공지원과 : 지자체 및 교육청,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
- ※ 행정기록관 : 한시 및 폐지기관

○ 국가기록원-각급 기록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

- (내부) 원내 현안지원반*을 구성·운영하여 핵심역량 공유 및 내부협력 강화
- * 기관의 실무 복합현안 발생 시, 유기적인 협업 및 기록관 맞춤형 지원 제공
- (외부) 전문가 자문회의체 구성·운영, 학계와 현장과의 협력 강화

□ 공공기관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 관리체계 개선

○ 「공공기관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혁신 사업」 추진

- 단위과제 운영체계 재검토→분류체계 개선(안) 원내외 의견수렴 후 확정(~6월)
→단위과제·보존기간·기록유형 조사(하반기)→중앙부처 개편안 적용 실시(20년~)
- * 단위과제 확정 절차(기록관리기관 관여 여부), 보존기간 연계(현행 1:1), 하부 관리단위 운영 등

○ 기록 보존기간 준칙 개선을 통한 체계적 기록관리 지원토대 마련

- 준칙 적용 범위, 확정절차 등 운영체계 재검토
- ※ 기존 공통적용 기준표→준칙화 / 정책·사건·기록유형(동종대량 등) 등의 「특정준칙」 검토
→ 재검토 결과를 반영 「국가기록원 보존기간 준칙 운영규정」 제정

○ 생산현황통보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

- (기록관) 연차별 생산추이 분석, 중요기록물의 생산여부, 이관대상 선정 등
- (기록원) 생산 통계집 발간, 생산현황 분석보고서 공유, 이관대상 선정 등

과제2

현장과의 협력을 통한 주요기록물 이관·수집 강화

- ◇ 기록물의 가치평가를 통한 국내외 주요기록물 이관·수집
- ◇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 운영 준비

□ 기록물의 가치평가를 통한 주요 기록물의 이관·수집

- 국가적 기록물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통한 기록물 선별·수집
 - (전자) 중앙행정기관(특행 포함) 이관대상량 약 500만 건 예정
 - (비전자) 각급기관 '19년 이관희망 대상(34만 권) 중 약 8만 권 선별·수집
 - ※ 최근 3년간 수집내역 : '16년 59만여권(대일항쟁기위 44.5만권 포함), '17년 약9.5만권, '18년 약1만권
- 주요 정책기록물의 체계적 보존·관리를 위한 기획수집
- 검찰·군이 생산한 주요 수사기록 현황 파악 및 이관 협의·수집

□ 한시·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강화 및 기록물 이관·정리

- 「한시·폐지기관 기록물관리지침」 개정안 마련 등 체계적 관리 강화
-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기록물 차질없는 이관 및 후속조치
 - 기록물 이관('19.3.) 후 조속한 정리·등록 및 공개서비스 제공('19년 연내)

□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운영체계 및 세부절차 확립

-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에 대한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(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신설)
 - 폐기금지 대상, 결정 및 해제 절차, 각급 기관 이행사항,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
- 폐기금지 절차별 중앙·영구기록물관리기관, 공공기관의 역할 및 업무 설계

□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고 시의성 있는 국내·외 기록물 수집

- 3.1운동('19년/100주년), 부마항쟁('19년/40주년), 6.25전쟁('20년/70주년), 4.19의거('20년/60주년) 등 역사성·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·수집
-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기록, 6.25전쟁 관련 UN 참전국 대상 주요 기록, '고려인' 기록물(카자흐스탄 등) 등 기획 수집

4. 국가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서비스 혁신

과제1

주요기록물 복원 및 전자기록 장기보존 체계 구축

- ◇ 국무회의록 등 중요 기록 복원 및 대외 협력 지원
- ◇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 및 유형별 보존 포맷·방식 개선

□ 훼손된 주요 기록물의 신속한 복원 추진

- 국무회의록(50년대), 6.25 관련 등 2,000여매, 시청각기록물 49,400점 등
- 민간·공공기관 보유 중요 기록물 맞춤형 복원·복제 지원
 - (절차) 공고·신청접수(~3월)→전문가 심의(4월)→선정통보·추진(5월~12월)
 - (대상량) 종이류 복원·복제(500매), 시청각류 매체변환·보존처리(400점) 등
 - ※ '18년 : 세월호 수습 기록물,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 상장·영상, 6.25 전상자 명부 등

□ 대외 보존복원 분야 교류·협력 추진

- 영구기록물관리기관(서울·경남기록원)의 보존업무 및 복원실무 역량 제고
 - (복원 실습 교육) 훼손 종이기록물 기초수선·복원처리, 시청각기록물 보존처리, 상태검사 및 처리장비 운용 방법 등(성남 복원실)
 - (보존·복원 컨설팅) 복원처리 현장 컨설팅, 보존 기록물 특성에 맞는 보존·복원처리 방법 자문 등(기관 현장 방문)

□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 및 유형별 보존 포맷·방식 개선

-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 및 유형별 보존포맷정책 다양화
 - 기존의 포맷변환 방식 외에 에뮬레이션 등 다양한 보존전략 채택 가능
 - 유형별 보존포맷 선정기준(공통, 고유) 수립, 포맷별 평가 후 권고
 - ※ 원내·외 의견수렴(~3월)→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·확정(6월)→상세 이행계획 수립(하반기)
- 데이터세트 유형 전자기록 보존 방안 및 포맷 연구 ※ R&D사업 1.7억
 - 데이터세트 유형의 권장 보존포맷 선정 및 보존포맷 공공표준(안) 작성

과제2

기록물 공개제도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

- ◇ 비공개 상한기간 도입 등 공개제도 개선 추진
- ◇ 기록을 활용한 편찬·콘텐츠개발·전시 등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

□ 기록물 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(안) 마련

- 국가안보·외교·개인정보 등 기록물 성격별 「비공개 상한기간」* 도입
* 생산 후 30년경과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방·안보,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계속 비공개하는 기록물의 상한기간을 설정(예: 개인정보 120년 / 국가안보 60년 등)
- 30년 경과 기록물의 별도 공개기준 및 열람절차 등 개선안 마련
※ 현재 기록물의 열람·제공은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음

□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운영 내실화로 알권리 강화

- 주기적(5년/30년) 재분류를 통해 공개로 적극 전환
- '19년 대상량 : 약 15만권(30년 경과 3만권, 30년 미경과 12만권 예정)
- 주요 정책·사건 기록물의 '기획 재분류'로 공개서비스의 질 향상
※ 국민적 관심사, 역사적 사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, 일괄 재분류 추진

□ 이관기록물 정리·등록을 통한 기록정보 서비스기반 확충

- (대상) 미정리 비전자기록물 약 29.6만권(예산 3,368백만원)
※ (5년간 실적) 16만권^{14년}, 13만권^{15년}, 14만권^{16년}, 19만권^{17년}, 24만권^{18년}
- (효과) 투입인력(124명×9월/일평균) 중 취업취약계층 50%이상 일자리 창출

□ 해외기록물 등록정보 보안을 통한 권익구제 등 대국민서비스 강화

- (대상) 故 김광렬 기증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명부* 인명정보
* 아소(麻生)산업 건강보험대장, 근로자명부, 공상원부, 화장인가원부 등
- (내용) 명부별 인명정보 항목 확인 및 인명정보 추출, DB화
※ 故 김광렬 기증 기록물 CAMS 목록 등록 완료(2,337철 3,949건) 및 명부 일부 디지털화

□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대국민 인식 확대

- 「주요 정책기록 해설집」(노동편) 발간
※ 경제('14), 산업('15), 복지('16), 교육·교육('17) 기 발간 배포
- 「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」 개발·서비스 ※ 50년대, 60년대 콘텐츠는 기 구축
- 국립영화제작소 생산 70년대 문화영화, 제작계획서 140여건
- 「국무회의록의 재발견」(제3차~제9차 개헌과정) 개발·서비스 ※ 1, 2차 기 구축
- 3.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 개최(2.22.~9.15.)

5. 대통령기록관리 정책 역량 및 전문성 강화

과제1

대통령기록관리 정책 역량 및 협력 강화

- ◇ 대통령기록관리 법령 정비 및 중장기 인력·예산 확보
- ◇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대외 협력 강화

□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조속 시행 및 시행령 개정 추진

- 대통령기록물법 개정(안) 상반기 국회통과 및 시행을 위한 준비
-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

□ 대통령기록관리 중기 예산 계획 및 중기 소요인력 설계

- (중기사업예산)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 개편 정보화 예산(43억) 등 2020년 총 144억* 중기 및 단년도 예산 확보 노력 *일반 76.9억, 정보화 67억
- ※ 최근 3년간 예산추이 : '17년 129.7억(예비비 26억) / '18년 92.5억 / '19년 115억
- (중기소요인력) 대통령기록관 업무 분석 후,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

□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추진

- (기록관리체계)표준전자문서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, 데이터세트·웹기록(홈페이지·SNS) 등 다양한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
- (서비스시스템)대국민·전직대통령 등 다양한 기록 열람 수요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및 최신기술(3D/VR 등)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방안 마련
- (데이터품질)기록정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 표준 정립 및 입수 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증·관리 강화로 오류 최소화

<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ISP 사업 >

- 소요예산 : 3억원(부가세 포함, 일반연구비)
- 추진일정 : 사업계획 수립('18.12.) → 계약추진('19.2.) → 사업추진('19.2.~7. / 5개월)

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협력 체계 강화

-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(보좌·경호·자문) 기록관리 컨설팅 추진(수시)
- 처리과 담당자 집합교육(상반기), 기록물관리책임자 간담회(하반기)
-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 모범사례 발굴 및 보상방안(포상 등) 마련

과제2

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·서비스 내실화

- ◇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등록·관리 및 지정·비밀 보호 강화
- ◇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·복원 및 대통령 기록문화 가치 확산

□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정리·등록 및 지정·비밀 보호

- 역대 대통령(16~17대 대비실, 민평통 등) 및 폐지위원회 기록물 등록
※ 역대 : 이관상자 297개(문서·시청각) / 폐지위원회 : 이관상자 4개(시청각)
- 행정박물(약 4,200여점) 시청각기록물(135,221건) 등록
- 국민 알 권리 중심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(17대 276만건 등) 추진
-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물 아카이브 구축(서비스·공개·열람 등) 방안 마련
- 보호기간 해제된 지정기록물의 체계적 사후 관리(1~11월)
- 보호기간 만료 또는 미책정된 비밀기록물 재분류*(약 1만5천건 예정)
* (대상) '19년 보호기간 만료, '14년 연장, '18년 미처리 이월(상·하반기 2회)
* (절차) 검토서 작성(3월,7월)→관계기관 의견조회(4월,10월)→전문위 상정(6월,12월)

□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·복원 및 보존환경 관리

- 소장기록물 복원·보존처리* 및 보존·활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**
* 복원 → 훼손 3등급 800매, 보존처리 → 행정박물(24철), 목가구(8철), 수탁기록(287건) 등
** 문서 4,300권 / 시청각 3,200시간, <현 처리누적율 문서(30년 이상) 77% / 시청각 62% ('18.12.)>
- 대통령 중요기록물 예방적 보존을 위한 기초 보존처리(총 10,424철*)
* 상태검사(924철), 탈산(8,000철), 소독(1,500철)
- 안정적 보존을 위한 최적의 보존환경 유지 : 보존환경 점검(상시), 서고 내 유해물질 조사(연 2회) 및 유해생물 조사(연 4회)
-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(PAMS)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분석 및 정비*
* 등록규격 및 철·건간 정보, 비규격 코드 사용 등 오류파악·정비 등

□ 대통령기록 콘텐츠 및 학술연구 지원 등을 통한 기록서비스 강화

- 대통령기록포털·콘텐츠 개선 및 소장기록물 목록* 제공 서비스 확대
- 시의성 있는 대통령기록 소개 및 소장기록 업데이트 등 정기적 콘텐츠 제공
* 254,406철 · 7,583,496건(문서 365만건, 시청각 388만건, 행정박물 등 5만건 5%→100%)
- 학술열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효과적인 연구활동 지원사업 추진
- 대통령기록전시관 대통령별 전시물 보강 및 시의성을 반영한 전시 추진
- 초·중·고 교육과정 연계 대통령기록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